

# 광주시 과학벨트 땅값 평당 1만원 파격제안

## 내일까지 입지 후보지 내역서 제출 선정돼도 조성비 등 수천억원 부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1차 관문인 입지 평가를 앞두고 과학벨트 유치전에 뛰어든 광주시 등 주요 지자체들이 1점이라도 더 따기 위해 '답안지'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입지로 선정되더라도 토지 수용비를 비롯해 수백억~수천억원에 이르는 부지 조성비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 '평당 1만~1만5000원' 제시=과학벨트 유치전에 뛰어든 비수도권 13개 시·군 지자체들은 오는 22일까지 과학벨트 입지 후보 부지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과학벨트 핵심 요소인 중이온가속기(33만평)와 기초과학연구원(10만~15만평)이 들어설 최소 165만㎡(50만평)이상의 부지가 해당 지역 어디에 있는지, 개발 상태는 어떤지, 땅값은 어느 수준인지 등을 적어내라는

애기다. 부지 가격 측면에서 보자면, 광주시가 '매입비 평당 1만~1만5000원'이라는 가장 파격적 제안을 내놓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평면에 있는 200만평 규모의 군 사격장 소유권을 국방부로부터 이전받기로 최근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땅은 감정평가 결과 평당 1만~1만5000원 수준이며, 과학벨트 입지 후보지로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아울러 빛그린산단과 진곡산단 등도 과학벨트 부지로 함께 제안했다. 경쟁 지자체들은 그러나 "저렴한 땅 값도 중요하지만 땅 사용할 수 있는지, 접근성은 좋은지, 도로 조성

비용이 추가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207만3000㎡, 약 62만7000평), 경제자유구역(375만㎡, 약 113만평) 등의 땅을 담당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 측은 부지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전남의 경우 평당 25만원 수준의 남산구 땅(원형지)을 앞세우고 있다. ◇입지 선정돼도 수천억 땅값 부담=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과학벨트 입지로 낙점된다 해도, 부지 관련 비용이 과제로 남게 된다. 지난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확정된 과학벨트 종합계획에 따르면 과학벨트 조성에는 7년 동안 모두 3조5487억원이 투입된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 등 기초과학 연구 분야 소요비용 2조4000억원, 중이온가속기 등 건설비 1조1000억원 등을 합산한 결과다. 그러나 여기에 과학벨트 부지 조성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과학벨트 입지가 정해지고 본격 사업에 들어가면 정부건, 지자체건 누군가는 땅과 관

련된 돈을 따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부지 매입 비용(평당)은 △대구 사이언스파크 28만원 △울산 하이테크밸리 36만원 △경남 진주 정촌 산업단지 23만원 수준이다. 부지 조성 정도가 달라 단순 매입비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세종시의 부지 분양가는 14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이 조사 결과를 단순히 과학벨트 필수 면적 50만평에 적용할 경우 전체 부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은 1150억~7000억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많은 지역의 경우 조성 비용 등까지 더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과학벨트 부지 확보에도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1조원 가까운 추가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과학벨트위나 정부는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지로 선정된 지자체가 부지 조성비 전액 또는 주도적 부담에 동의할지, 근본적으로는 막대한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한지 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20일 광주 빛고를 시민문화관을 찾은 학생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전남유치를 위한 서명문'에 서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과학벨트를 광주로”...유치 서명 50만명 돌파

광주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전남 유치를 위해 '300만명 서명 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20일 현재 50여만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작된 서명운동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현재까지 50여만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일부 시·도민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과학벨트의 광주 유치 당위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도민들은 "시·도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줍니다" "호남의 중심도시 광주에 과학벨트가 유치돼야" "삼각벨트 조성으로 대한민국이 잘 되리라고 확신합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잇따라 남기고 있다. 강은대 시장은 "과학벨트 유치 열

의를 담은 시·도민 300만명 서명운동에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다"며 "시·도민이 유치를 열원하는 메시지를 통해 홍보멘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2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4대강 친수구역 개발 본격화

##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연내 시범지구 2~3곳 지정

친수(親水)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이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시범사업지구 2~3곳이 이르면 연내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됨에 따라 오

는 7~8월께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뒤 이르면 연내에 우선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친수구역 사업은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사업 시

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km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올해 말 지정될 시범지구는 한강,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과 금강, 영산강 가운데 1곳 등 2~3곳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강의 경우 사업성이 높은 서울지역에 친수구역을 조성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땅값이 높지만 수요가 많아 분양성이 뛰어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구간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중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 개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친수구역 조성지침'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친수구역 개발에는 수자원공사가 가장 적극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내 시범지구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초석은 다져진 것"이라며 "첫 사업인 시범지구는 연내 지정이 목표지만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빛日만평

-김종두



같이 미쳐야 할 모양이다

## 전관에우 금지법 4월 우선 처리

### 국회 사개특위 중수부 직접수사권 폐지 합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는 20일 관·검사 출신의 전관에우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관에우 금지 등은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라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수임을 1년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원·경찰청·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법률사무소 개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28~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대검 중

수부 직접수사권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20명으로 증원안을 비롯한 법원·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처리를 연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 중수부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안에 대해서 이견이 거의 제기되지 않아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을 놓고는 이날도 격론이 벌어졌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사건이 2600건이나 된다. 증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으나 민주당 조배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맞섰다. 특별수사청에 대해 민주당 신건 의원은 "공직비리수사처가 안되면 특수청의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찬성했으나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검찰의 일부 기능을 국회 통제하에 두는 것이어서 반대"라고 주장했다. /박지기자 jpkp@



## “아빠! 원자력이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친환경 에너지래요!”



가장 경제적인에너지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가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안전에너지, 원자력

- ① 30년 운용노하우 - 1978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준공 이후, 30여년간 무사고 운영
- ② 빈틈없는 완벽설계 - 다섯걸 방호벽으로 방사선 완벽 차단/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대처
- ③ 유능한 전문인력 - 원자력 전문교육기관에서 정교교육 실시 /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황훈련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  
**KIP 한전KPS(주)** 영광사업소